



## [해양환경 기고문 제1호]

### 해양 경제(Ocean Economy)에서 청색 경제(Blue Economy)로

#### - 해양경찰청 업무의 ESG적 관점의 검토 -



법무법인 세종 황성익 변호사

“바다 해(海)” 라고 쓰고 “사랑 해” 라고 읽는다. 바다는 생명이고 생명들의 산실이자, 우리의 터전이다.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를 도외시킬 수 없다.

기존의 해양 경제(Ocean Economy)는 해양과 해양의 산출물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이다.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면 해양 경제는 6개의 산업영역 즉, 해상운송, 관광 및 휴양, 해양 생물자원, 해양 건설, 조선 및 보트 건조, 광물 추출을 포함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연안 경제(Coastal Economy)는 연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박광서, 황기형, “세계 각국의 해양 정책과 Blue Economy에 관한 소고, 해양 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발간한 『2030년 해양 경제보고서』에서는 해양 경제를 해양 기반 산업과 활동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상호 연계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해양의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위 보고서에서는 미래 해양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 증가, 경제 및 국제무역에 따른 소득 증대와 수요 확대, 식품, 에너지, 환경 악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 마지막으로 국제 규제와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다(주OECD 대표부, 2030년 해양 경제보고서(요약)).

최근 해양 정책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청색 경제(혹은 남색 경제, Blue Economy, 해양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체계)는 특정 산업군이나 한정된 지리적 범위의 경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해양이 제공하는 기회와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그로부터 성장의 기회를 찾는 인류 경제 사회의 새로운 발전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색 경제는 글로벌 당면 과제인 지속가능성 원칙의 강화, 사회 및 경제 각 분야로의 침투, 기후변화, 자원공급의 압박, 해양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동인으로 한 인류사회의 필연적 선택이자 기회 창출의 정책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광서, 황기형, 전개 논문).



해양은 지구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공유재로서 Gattett Hardin이 1968년 『공유지의 비극』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문제가 청색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대두된다. 향후 국내적, 국제적 전환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될 것이므로 여기에 간략히 소개해 본다.

우선 주체(Ownership)의 문제로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전체 해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상을 두고 각국 및 국제기구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할 수 있다. 다음은 책임성(Accountability)으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상호 간 해양오염, 남획, 과잉 개발규제 유인책이 다르고 그 결과로 영향의 범위가 괴리되어 있는 게 지적된다. 그 다음으로는 발전(Development)의 문제로서 경제와 환경의 대립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더 큰 피해를 본 해양산업과 해양산업 내의 소기업, 저소득, 여성, 청년의 피해보다도 육상의 경제 활동의 회복에 더 큰 주의가 기울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청색 경제로의 전환이 더더욱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인성(Visibility)이다. 해양은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무한의 에너지원(풍력, 조력, 지열, 파력, 부유 태양열), 바이오 메탄, 수소 등의 재생 에너지원으로 여겨지며 태양광 패널(티타늄), 풍력터빈(니켈, 구리), 그리고 배터리(아연, 브롬, 망간, 코발트)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저에서 이러한 광물을 추출하려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치열해질 것이다. 나아가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국내적 해결책으로서 탄소 포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해양 지중 개발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녹색 기술이 해양이라는 자연에 끼치는 영향까지는 상대적으로 주의가 덜 기울여지고 있다. 녹색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이 생물 서식지 파괴, 충돌, 소음 및 전자기 오염, 부유 퇴적물, 비 토착종 유입, 철새 등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도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KPMG International, You can't go green without blue, 2021 참조).

청색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 정책을 펴나갈 것이고 기업은 생존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ESG 경영의 관점에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SG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를 간략히 표현한다면 기업 활동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inside-out impact)과 기업 활동의 외부에 존재하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요소들이 다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장단기적으로 끼치는 영향(outside-in impact)을 고려하여 위험을 판별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경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청색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활동의 영향과 비용을 분석하고 산업 생태계 속 공급망 가치사슬을 분석하게 된다. 수산업, 항만, 해운, 관광, 양식업 등 해양에 1차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업 활동인지, 해양 자원 및 해양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심해 채굴, 생물공학 관련 활동 인지에 따라 중점 관리가 필요한 이슈가 달라진다. 또한 기존의 육상 기반 사업활동으로서 농업, 운송업, 제조업, 금융업, 사회간접자본 등의 사업도 앞으로의 청색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해양 관련 온실가스 규제나 녹색 금융 등의 흐름도 주시하여야 한다.

우리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청색 경제로의 이행과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한 파고를 특히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적 조직인 해양경찰청은 소관 법률과 업무에 따라 규제, 관리, 지원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현존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해양 오염 방제의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에 대한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한다. 중대성 평가를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이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 발생원에 대한 충분한 대비태세를 예방적, 사후적 측면에서 모두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정책도 청색 경제로의 이행과 ESG 경영의 흐름에 맞추어 재설계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행정조직 법적 대응 그리고 행정작용 법적 대응으로서 권한의 내용, 범위, 업무절차의 효율성 강화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 및 환경오염과 관련한 국제협약의 동향 파악 및 대응을 포함한 부단한 정책적 모색, 법규의 개정, 그리고 예산의 확충도 필요할 것이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은 본연의 업무 자체가 청색 경제로의 이행 및 ESG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전제해야 하는 제도적 틀이다. 포괄적이면서도 꼼꼼한 해양오염 방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이 청색 경제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ESG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길 응원한다.